

# ‘현대판 노예’ 양산하는 탈법 직업소개소

### 정부·지자체 관리 허술...결핍기식 점점 그쳐 무허업소 실태 파악조차 못해 불법알선 방지 제대로 된 선원 양성·공급 시스템 마련 시급

직업소개소가 이른바 ‘현대판 노예 양성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가 직업소개소의 불법 노동 알선 행위를 키우는 데 한 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핍기식 점검, 노예 만드는 ‘독버섯’으로=경찰청이 내놓은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감금·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적발된 26명 중 8명이 직업소개업자 등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인권침해사범 특별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 110명 중 상당수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직업소개업자의 갑언이설에 속아 종노동에 시달리는가 하면, 감금·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청 관계자는 “직업소개소가

인권침해 사범의 ‘원흉’이라고 할 정도로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직업소개소가 독버섯처럼 늘어나게 된 데는 정부·지자체의 무관심과 부실한 고용 시스템이 한몫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소 실태 점검을 소홀하게 실시했다. 직원 현황 등만 형식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는가 하면, 분기별로 해야 하는 정기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전남청 등 경찰이 대대적 단속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적발한 실적을 고려하면 지난해 119곳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선급금 납부 업체 1곳을 단속한 목포시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표자와 종사자, 사무실 20명이면 쉽게 신고가 가

능해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반면, 인력은 한계가 있어 꼼꼼히 점검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허가받은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어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권침해·임금 착취 등의 사례가 상당수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점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시스템도 문제=목포지역에서 20년간 활동해 온 선장 A(63)씨는 “9.77t급 어선을 운영할 경우 그물을 감거나 그물에 잡혀 올라온 물고기를 빼내는 선원 등 적어도 5~6명이 필요한데,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현행 선원법상 20t 이상 어선이 5t 이상의 상선’에 대해서만 해양항만청이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거쳐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새우·멸치 낚부 업체 1곳을 단속한 목포시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표자와 종사자, 사무실 20명이면 쉽게 신고가 가

기식으로 많은 소개비 등을 주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일부 선주들은 “업자가 요구하는 소개비 등을 내지 않으면 선원 구할 생각도 말라”는 직업소개소의 ‘배짱’에, 어선 운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작업 도중 선원이 도망가도 일손 구하기 어려워 직업소개소에 보상 등을 말할 형편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광주서부경찰이 구속한 심모(52)씨의 경우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4차례나 적발, 13년을 복역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버젓이 운영하며 노숙자 100여명을 섬에 팔아넘겼다.

열악한 영세 어민들의 실정을 고려해 선원 양성·공급을 위한 양성화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직업소개소 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올 첫 연합학력평가 ‘집중 또 집중’**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광주 동아고 수험생들이 12일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2교시 수리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이날 시험은 올해 수능에 맞춰 국어·수학 영역은 수준별(A·B형) 유형을, 영어는 단일 유형으로 치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염전 노예 다시는 없게”

### 경찰, 근로자 권리고지 확인서 제작·배포 전남도, ‘천일염 인력공급센터’ 운영키로

경찰이 ‘염전 노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불법·부당한 일을 시킨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일일이 제작·배포하는 등 인권 침해 방지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도 ‘양성화’된 일차리 공급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 권리고지 확인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임금 체불·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직접 신고가 늘어 인권 침

해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1곳 경찰서를 통해 불법·부당 피해사례 및 불법·부당한 일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고지 확인서’를 염전 업주·직업소개업자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저임금 사업장 근로자 또는 장애를 가진 근로자 등 자기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근로

자들과의 근로 계약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권리고지 확인서를 나눠줄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노동자와 고용주 간 근로계약서 작성이 자연스럽게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인권 침해 사례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또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염전 노예’ 사태가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 염전 등에서 일할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천일염 인력공급센터’(가칭)를 설립·운영키로 했다.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마련,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인권 침해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보안법 위반 맞아?”...軍검찰 부실 수사·기소 도마에

### 미흡한 자료로 공판일 연기 광주지법, 자료 보완 주문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부실 수사·기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흡한 자료 때문에 공판 기일이 연기되는가 하면, 공판 과정에서도 ‘두루뭉술한’ 공소 사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담당, 기소된 군인이 제대해 (민간) 검찰이 기록 보완 등으로 바빠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 구성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생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불특정한 공소 사실 및 증거 자료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조씨는 지난 2010~11년 6·15 공동선언선 청년학생연대(청학연

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국가 단체가 청학연대 또는 북한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적 동조와 관련, 조씨가 누구의 어떤 활동에 동조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설창일 변호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 조씨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자료도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캠프에 참가했다가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조순대생 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은 검찰이 기록 검토·보완 등을 이유로 연기 신청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공판 기일에 열리지 못했다. 이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홍현수·이소아 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건 모두 기무사가 기초 조사를 거쳐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대상자들이 제대하면서 군 법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광주지법이 공소 유지를 맡게 된 것이다. 이외 다른 한 명도 대학 재학 당시 청학연대 통일캠프에 참가해 비슷한 시기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 제대해 현재 경찰이 조사중이다.

설 변호사는 “청학연대의 이적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동조했다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전역 당일 공소장을 받게 된 조씨 사례의 경우 군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실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내놓은 결과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여성·매수남 나란히 경찰서행

○~목포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여중업원과 매수남 등 10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과 7개 경찰서 합동단속팀 28명·목포세무서 직원 2명 등 30명이 지난 11일 목포시 상동 A안

마시술소를 상대로 단속에서 영입실장·여중업원·매수남 등 10명을 적발했다는 것.

○~단속반은 정액이 담긴 콘돔 5개·현금 48만원·영업장부 2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는데, 경찰은 세무서 직원과 함께 영업 규모를 파악하고 소득 은닉, 탈세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 /이종행기자 golee@

### 집 곰팡이 제거·주거환경 개선, 아토피 치료 도움

집 곰팡이 제거, 환기 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토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삼성서울병원 아토피 환경보건센터가 지난해 아토피 피부염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4개월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교육을 한 결과 증세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삼성서울병원 환경보건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에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했다.

주거 개선 사업 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 중증도 점수는 평균 27.2점에서 9.8점으로 감소했고 피부산도 역시 5.2에서 5.1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 3월 출시

제품명: 간만에 식물의유형: 다류역삼차 원재료명 및 함량: 황침추출물(100%)  
 제조원: 황칠다남(주) 판매원: 황칠나라 전남 진흥군 진흥읍 해곡리 651-3 고객상담센터: 061864-5788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http://www.hcnara.co.kr)